

특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동시 추궁

“박 대통령 지시했다” 작성 여부 심문 장시호 남궁곤 등 추가 소환 조사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나란히 특검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이 구속된 이후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전날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11분께 사복 차림으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수갑을 찬 두 손은 하늘색 수건으로 덮은 상태였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협의를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 답변 없이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인물로도 꼽히고 있다.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정치·사회 등 각 분야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애초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실장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소환을 통보했지만, 조를 과정상의 문제로 오후로 조사가 연기됐다.

특검 관계자는 “출석 시간 조율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5분께 사복 차림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 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면서 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전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전날 구속된 뒤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에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최씨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이인성(51) 이대 의류산업과 교수 및 남궁곤

(56) 전 이대 입학처장,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도 이날 오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됐다. /뉴스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결의안’ 국회 통과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결의안’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안’ 등 26개 안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31명, 반대 87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우 원내대표가 발의한 결의안은 중·고등학교 국정화 교과서를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개정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교과서관련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1월 임시국회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 법사위 의결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야당 의원이 주로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으며, 재석의원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제출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석 175인 중 찬성 155명 반대 4인, 기권 16인으로 가결됐다. /뉴스

특검, “금명간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그간 소환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금명간 청구한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최씨의 신병을 확보,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특검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그간 7차례에 걸친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 24일 단 한 차례 출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소환 불응 이유로 ‘건강 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을 거론했었다. 하지만 전날 특검팀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팀의 강압수사’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도 “검찰과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간 최씨의 불출석사유를 검토해보니 건강, 재판 일정 등이었다. 하지만 어제 불출석사유를 보면 이제는 근거가 없는 강압수사를 문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서 강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변호인 임의 없이 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사한 사실은 없고, 최씨 등의 하에 면담을 실시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뉴스

“중앙집권·엘리트 중심의 시대 청산”

안희정 충남도지사, 대선 출마 선언... 지방분권시대 약속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2일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고 읽는 시대를 끝내자”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곳시어터에서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행사를 열고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안 지사는 “1987년 6월 항쟁 이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한다. 시대교체의 시작은 다가올 대통령선거”라며 “새로운 30년, 누구와 시작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30년 후를 내다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세상을 역동적으로 바꿔나갈 지도자가 필요하다. 임의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이

라고 자신이 시대교체의 책임자임을 호소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며 “그 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사드 반대투쟁을 하고 계신 경북 성주의 할머니부터, 저기 광주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당에 투표하신 자영업자,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부산의 어느 아주머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 직장인, 최근 처음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느 청춘남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개혁자 정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대통령도 필요하다. 구태와 낡은 관행에 불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더 이상 옛날에



머무르지 말고 박정희 시대와 작별하자. 20세기의 잘못된 유산과 헤어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복원돼야 한다”고 ‘협치’를 주요 정치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뉴스

안 지사는 “중앙집권시대, 한양중심의 시대,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 기만하 있어라’는 중앙집권시대의 지침은 세월호 선장의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지방분권시대를 약속했다.

문재인 “안희정 대선 출마 환영... 우리는 동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선출마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우리는 One Team! 언제나 동지다. 후보가 누구든, 우리는 이긴다. 멋진 경선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지사님의 출마선언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지사는 서울 종로구 혜화동 곳시어터에서 열린 ‘안희정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행사를 갖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무조건 때릴 수도 없고 나는 이거 더 잘해”, “똥해”라고 말하는 것도 디스(공격)하는 것 같아서 특히 말을 못하겠더라”고 말한 뒤, “이제 국민께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제 비로소 저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대통령직무실 세움총사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만들 것인지 어떤 의회권력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헌법이 작동해야 하는지를 내놔야 한다’며 “세움총사로 (집무실) 옮기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대안이라고 한다면, 너무 낮은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안 지사는 최근 “차차기는 나를 가두려고 하는 프레임이자 저를 공격하고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나쁜 프레임”이라고 반박하는 등 문 전 대표의 예비주자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문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하되, 소통·화합 등을 중심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뉴스



“쌀 우선지급금 환수는 정책실패 책임 떠넘기기”

양성빈 의원, “위기 대처 못한 정부가 환수방침 철회·결손처리로 방향 선회해야”

쌀 우선지급금을 둘러싼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우선지급금 환수방침 결정을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농가에 무책임하게 전가하는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

시 평균가격의 90%를 우선지급금 즉, 가 지급금의 형태로 9월에 지급하고 10월에서 12월 사이 수확기에 가격이 확정되면 다음해 1월에 확정된 100% 가격으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확정된 쌀 가격이 사전에 지급된 우선지급금 이하로 폭락하는 경우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지급된 우선지급금(1등급 40kg 기준 45,000원) 대비 860원이 낮은 4만4,140원으로 쌀값이 확정됨에 따라 여기서 발생한 차액을 정부가 환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환수조치를 강행할 경우 도내 농가의 환수규모는 총 4만5,300호 농가에 총 2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6만 원 수준이다.

금액으로 치면 많지 않은 액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라 농가에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다.

그간 농가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과 농산물 시장개방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쌀값 폭락이 우려되며 정부의 대책미련을 지속적으로 추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만 하고 정작 마땅한 액션플랜 없이 기존 정책을 관행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밀었다는 게 양성빈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우선지급금 환수는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 그동안 대내외적인 위기로인인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쌀값 폭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힘없는 농가에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제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환수방침 철회 및 결손처리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정부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양성빈 의원

바른정당, 내일 창당대회... 대선체 제 돌입

바른정당이 24일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한다.

바른정당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바른정당은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전북 대구 경남 제주 부산 경북 등에서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며 전국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23일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공식 현판식을 가진 뒤 창당준비 회의도 열 계획이다.

바른정당의 공식 창당을 앞두고 유승민, 남경필 등 당 소속 집권층들의 대권행보도 본격화 된다. /뉴스